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마이웨이 “나쁜 경제지표는 모두 과거 정부 탓”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세칭 ‘J노믹스’)은 혁명적으로 출발했다. 전통적 ‘시장중심 경제’의 판을 뒤엎고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율과 공정의 시장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대신, 대폭적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여서 매년 3% 이상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장밋빛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00일의 경제성적표에는, 초라함을 넘어 좌초와 몰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최근 통계들은 ‘IMF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기업투자와 고용률, 수출증가율과 소비심리가 동반 하락하면서 성장률은 뒷걸음치고 미래 경기마저 꺾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수많은 민간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월 30만 명 목표 달성은 일찌감치 물 건너가고 말았다. 더욱이 좌파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소득불균형 해소마저 오히려 매월 격차가 악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고용의 양과 질이 좋아졌고 경제는 일시적 성장통이 지나면 곧 좋아질 것”이라 자화자찬(自畫自讚)하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8.25 민주당 전당대회 축사)고 강변하고 있으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8.26 기자간담회)고 다짐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영업자·청년·저소득근로자들의 절규는 물론, 경제계와 학계의 우려에도 눈과 귀를 막고 현실과 동떨어진 강경일변도의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문재인정부의 우이독경(牛耳讀經)식 경제정책에 불안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0점 만점에 5.69점의 낙제수준으로 평가했으며(8.28 매일경제신문 여론조사), 소득주도성장이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재정지출 확대와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들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8.22~23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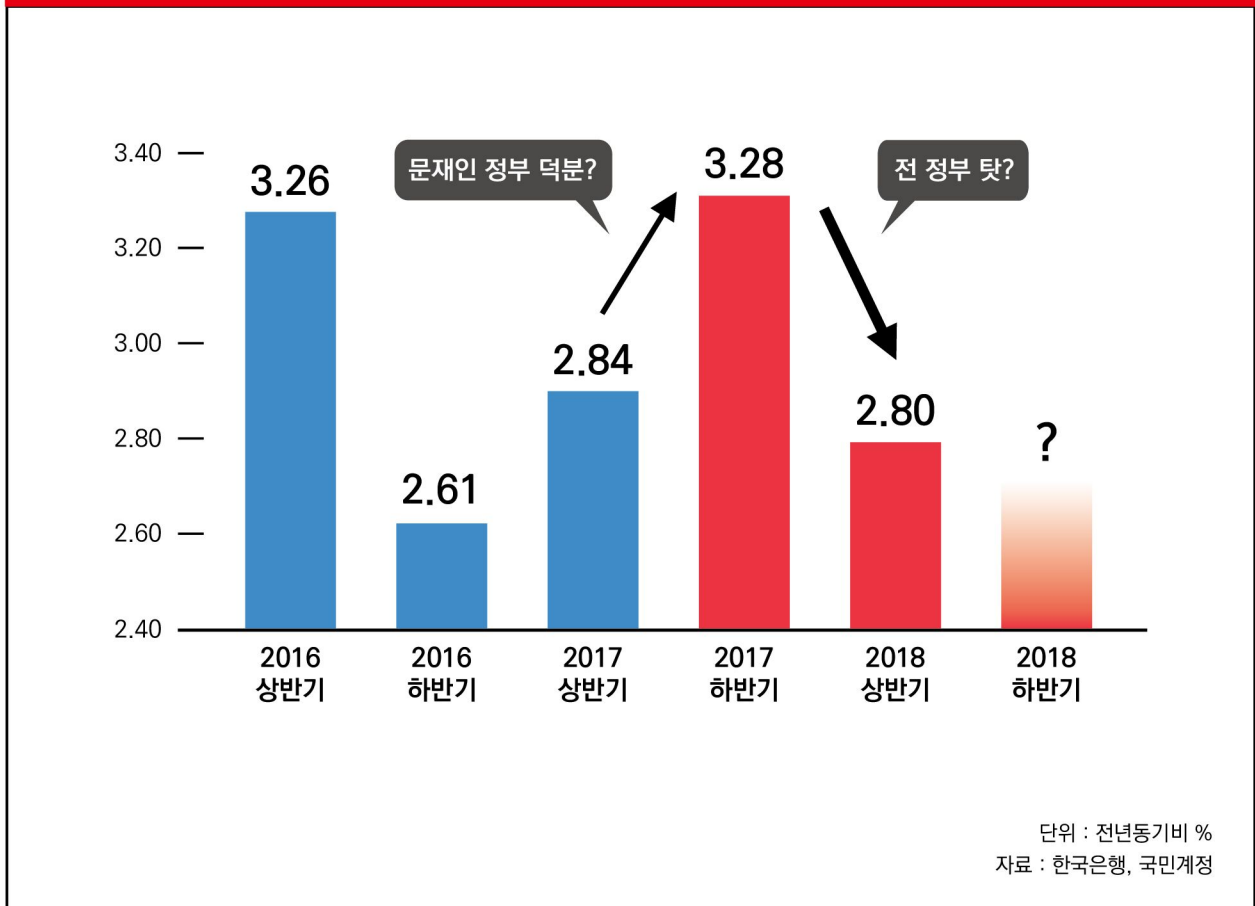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이러한 국민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를 특정 이념과 철학으로만 이해하려는 아집을 버리고, 규제혁파,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개혁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과감한 혁신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정부통계 등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500일 경제성적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모쪼록 이 평가서가 국민소득과 일자리, 경제성장과 국가재정, 국민생활 등 우리 경제 실상의 객관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참혹한 경제현실과 국민여론을 정부가 겸허히 받아들여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실천과제들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리하여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율경제체제 아래 정부의 규제혁파와 제도혁신 노력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올라가면 '내 덕분', 내려가면 '남 탓' 올 성장률 추락하자 '전 정부 탓'

문재인 정부 출범은 2017년 5월. 2017년 상반기(1~6월) 성장률이 2.84%에서 2017년 하반기에는 3.28%로 급등했다. 세계경기 회복세와 반도체 호조 때문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라 자랑했다. 하지만 16.4% 급등한 최저임금이 적용된 2018년 상반기에 성장률은 2.80%로 약 0.5%포인트 하락했다.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데도 말이다. 아직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날 때가 아니라며 전 정부 탓을 한다. 경제정책의 유효기간이 문재인 정부는 6개월, 이전 정부는 무기(無期)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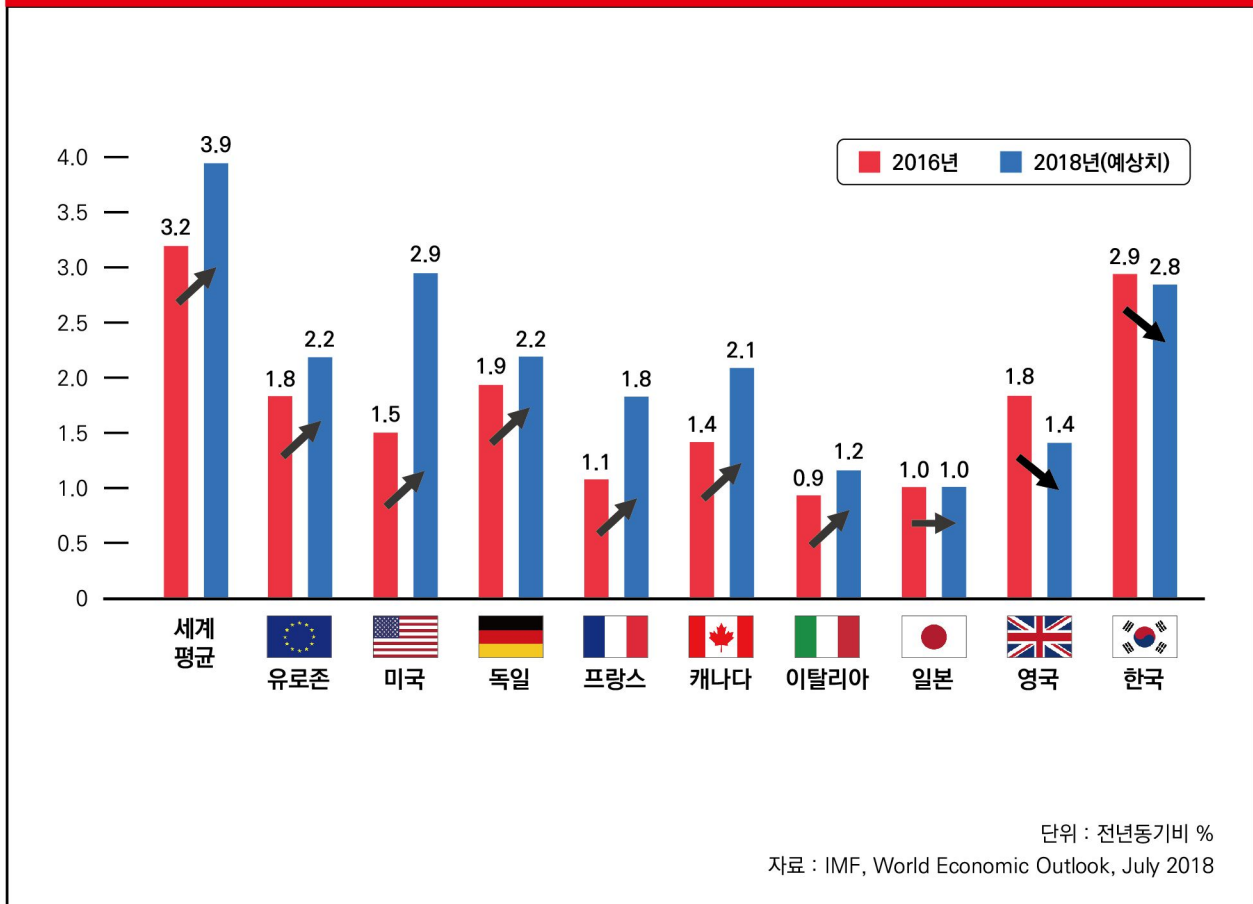
올 성장률 낮아지니 '남 탓'



주요국 성장률과 비교하니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를 **별나라**로 만들었다

최근 성장추세를 판단하려면 2016~2018년간 중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세계 경제 여건이 좋았던 2017년에는 대다수 국가의 성장률이 크게 올랐고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2018년 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올 성장률은 대체적으로 2.8~2.7% 정도로 전망된다. 2016년 대비 0.1~0.2%포인트 낮다. 반면 브렉시트로 어려움을 겪는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2016년보다 2018년에 더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소위 '추세적 상승' 기조를 보이는 대부분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만 나 홀로 '추세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실험의 결과가 우리 경제를 별나라(세계 경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는 나라) 경제로 만들어 버렸다.

성장률이 좋아진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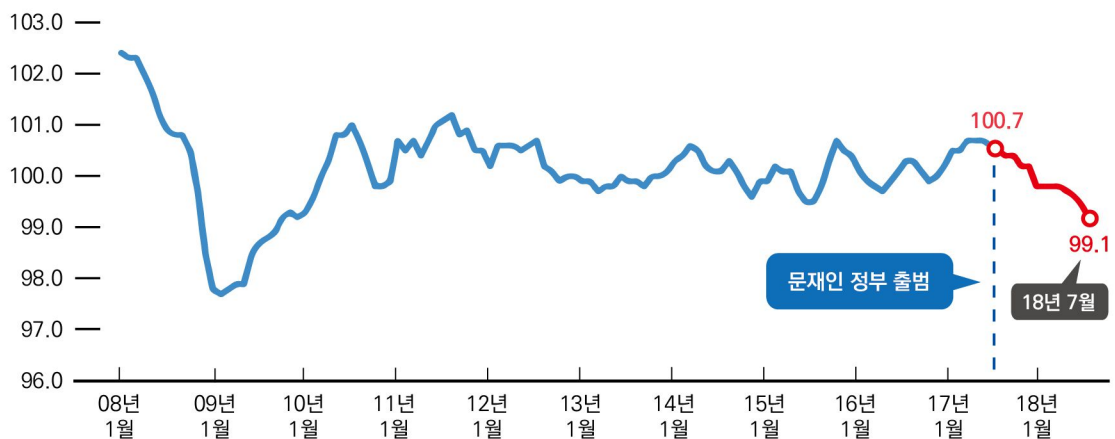


경제무능 문재인 정부

슈퍼예산, 추경 또 추경으로도 경기추락 못 막았다

문재인 정부,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두 차례의 추경까지 편성·집행했다. 다행히 세계경제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 웬만하면 죽었던 경기도 살아날 판이다. 현재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사용한다. 이 수치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는 100.7이었다. 올 7월에는 99.1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09년) 이후 최저다. 더 큰 문제는 출범 이후 내리 14개월째 내려갔다는 점이다. 위기상황도 아닌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경기는 추락. 문재인 정부의 경제무능의 극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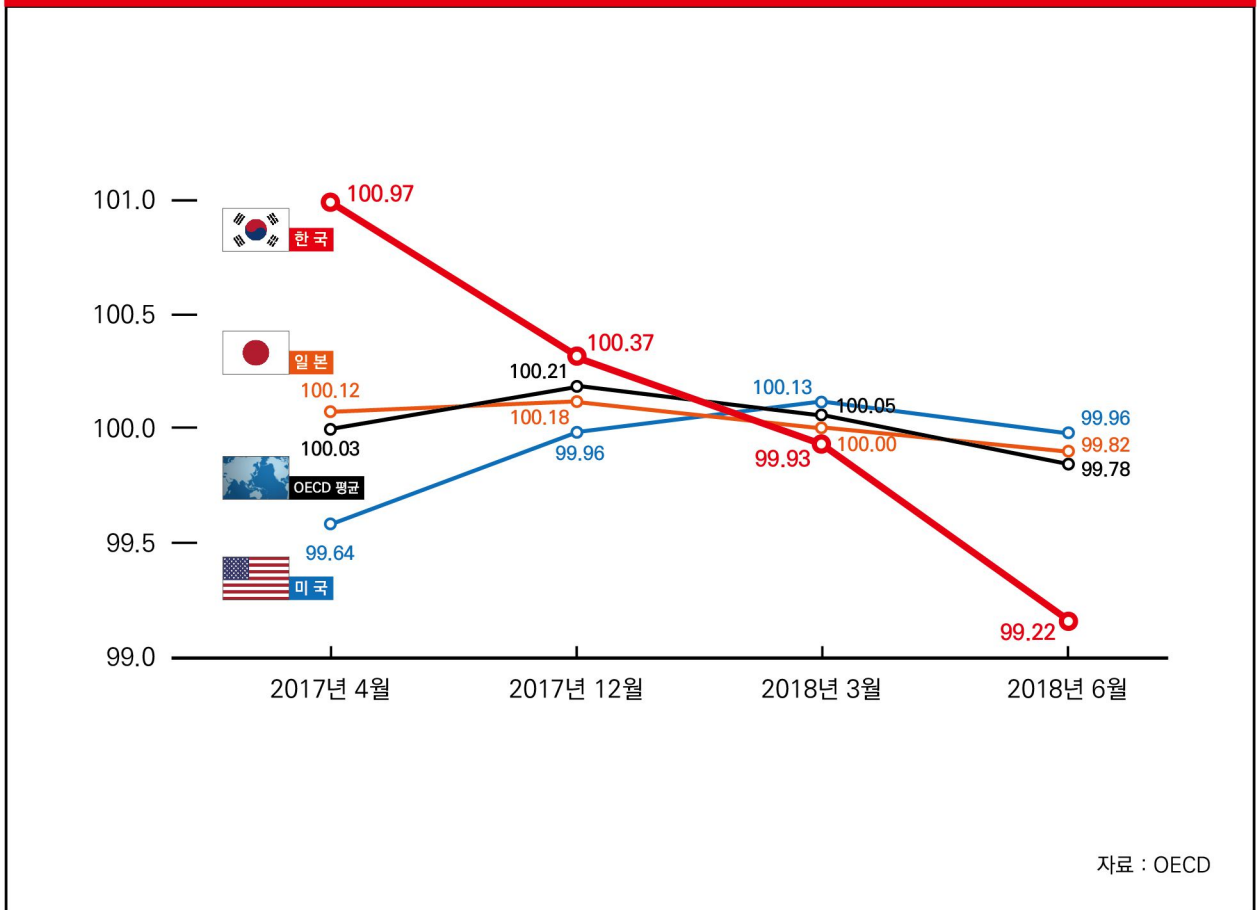


단위 : 2015=100

소득주도성장 마이웨이 문재인 정부 미래 경기마저 꺾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며 자신들의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를 보자. 6~9개월 뒤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통상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면 경기 하강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9월에 발표된 OECD 한국 경기선행지수가 16개월 연속으로 내리막이다. 한국만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만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 소득주도성장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경기둔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경기선행지수의 경고를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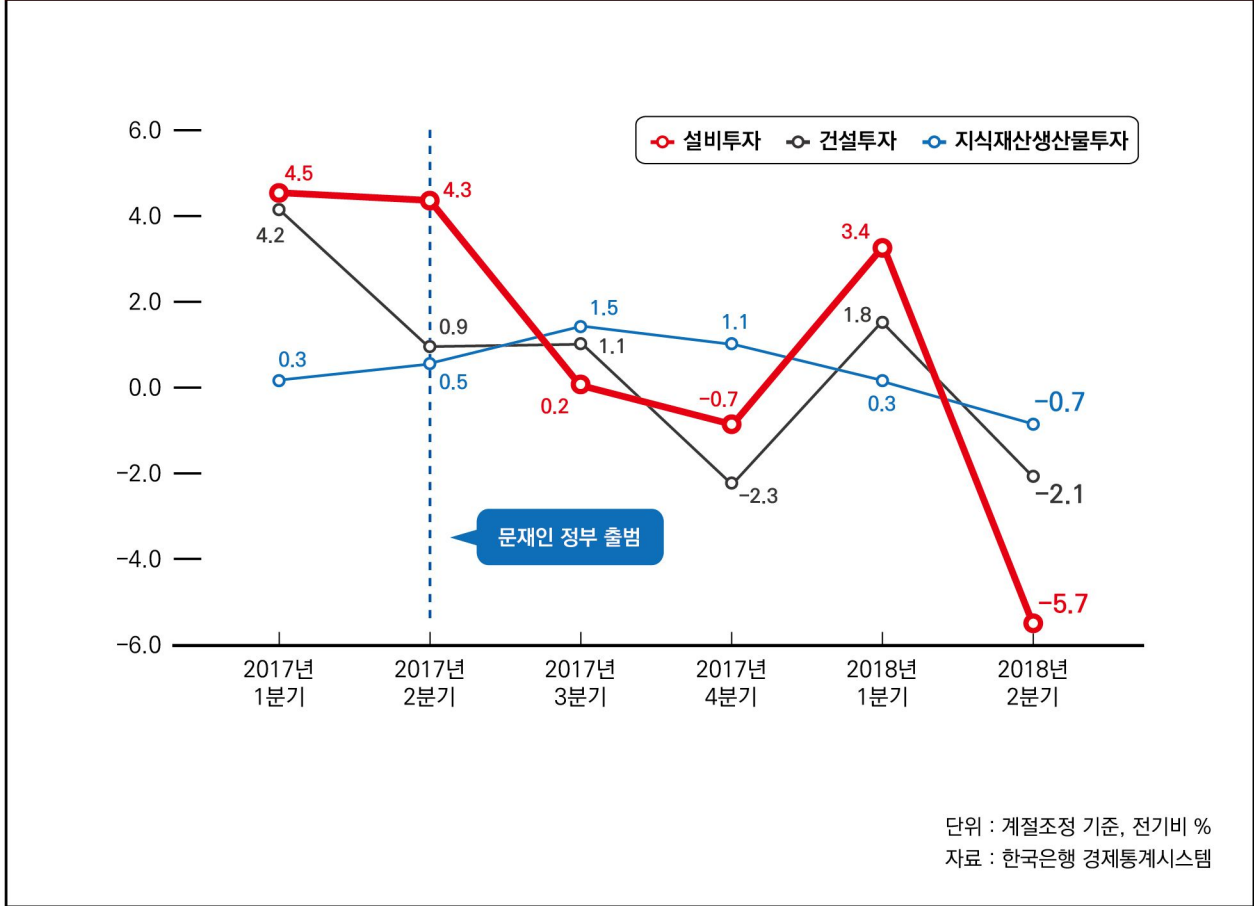
하락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



혁신성장은 멀리하고 적폐청산만 외치더니 결과는 투자청산이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기업은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적폐 존재일 뿐이다. 물론 완전한 왜곡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에 적폐 프레임을 씌우고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재벌해체 등 반기업적 정책을 밀어붙였다. 규제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도 한마디로 공염불이었다. 기업들의 한숨은 투자 감소로 나타났다. 급기야 올 2분기에는 설비, 건설, 지식재산 등 모든 투자 항목이 마이너스가 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적폐청산'의 광기가 기업 투자심리를 완전히 '청산'해 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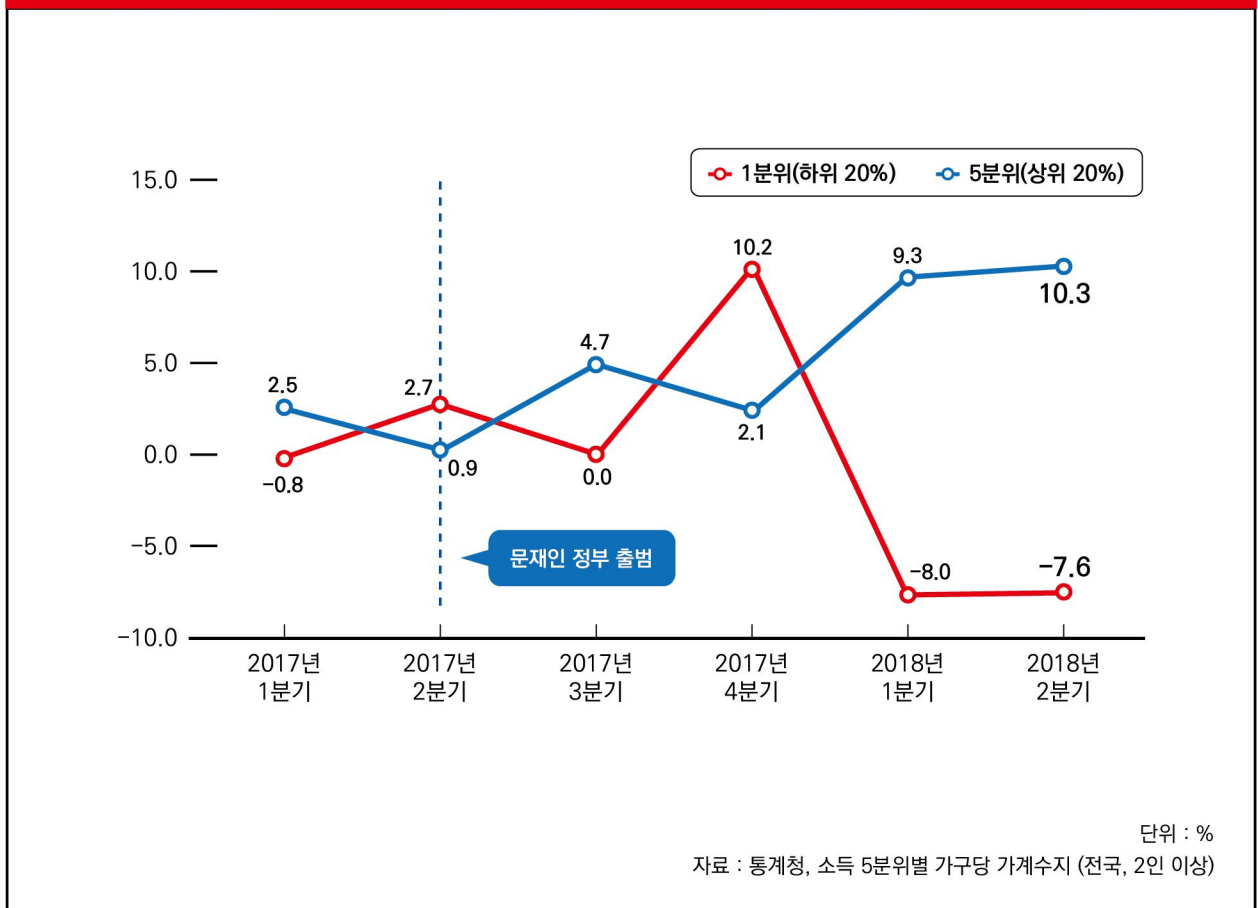
설비, 건설, 지식재산투자 모두 마이너스...청산된 투자심리



소득분배 개선하겠다고 하더니... 올 2분기, 최악의 소득 양극화 쇼크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양극화만 더 심해졌다. 올 2분기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7.6% 감소했다. 2분위, 3분위도 각각 2.1%, 0.1% 줄었다.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은 4분위와 최상위계층인 5분위로, 각각 4.9%, 10.3% 늘었다. 그 결과,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5.23배로 나타났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보다 5.23배 많다는 얘기다. 2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인 2008년 2분기(5.24배) 이후 최고치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목표인 소득분배개선은 고사하고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통계청장을 아무리 교체해도 '소득 양극화 쇼크'는 덮여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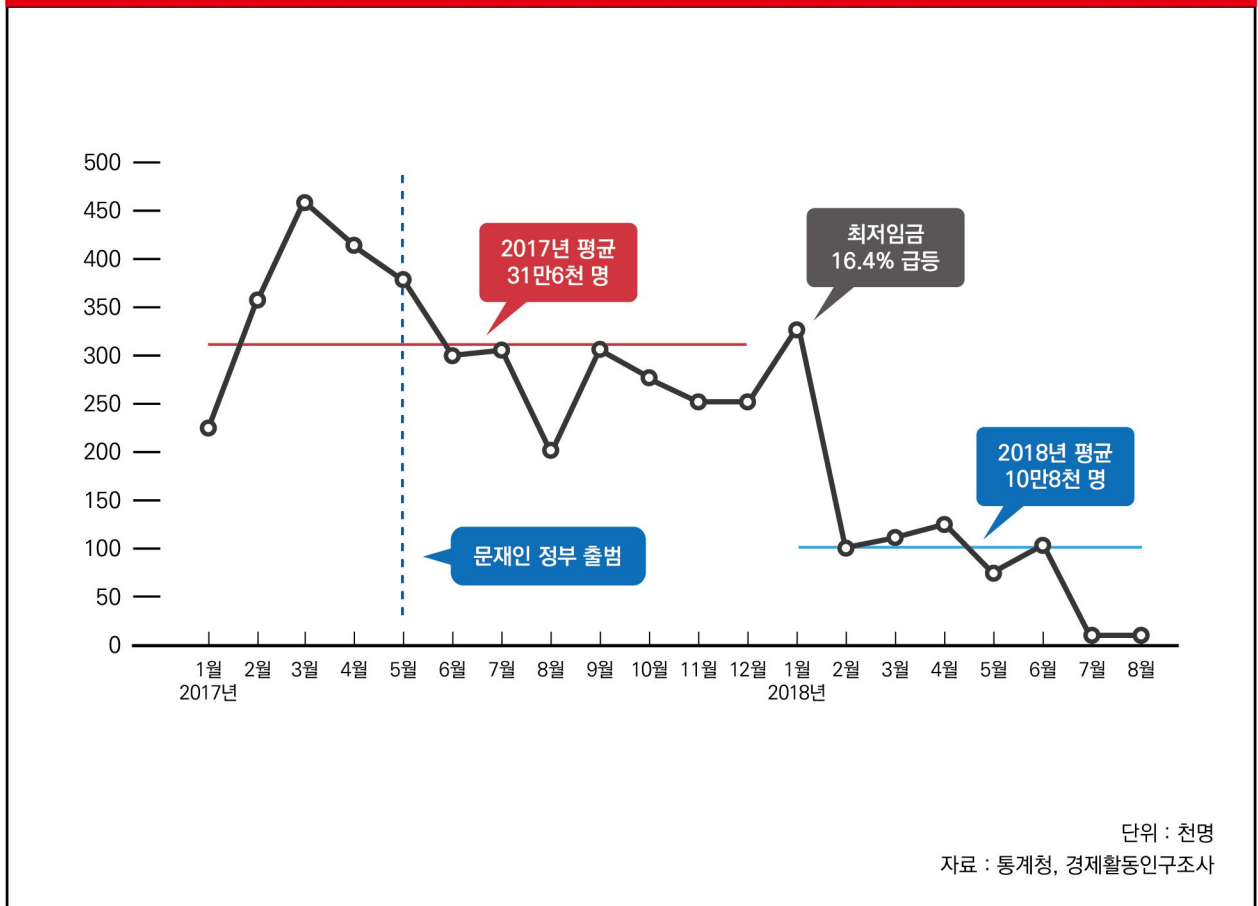
소득격차는 최악으로 벌어지고



일자리 상황판 쇼를 한 문재인 정부, 취업자 증가폭을 1/3 토막 내다

올 8월 취업자 증가폭은 3천 명에 불과했다. 고용 대란이라 불렀던 7월의 5천 명보다 더 축소되었다. 지난해 평균 일자리 증가폭은 31만6천 명이었다. 올해는 10만8천 명으로 1/3 토막이 난 셈이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화되자 2월 이후 8개월째 10만 명대 혹은 그 이하로 추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고용 대란을 넘어 '고용재난사태'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높이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와는 정반대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1/3 토막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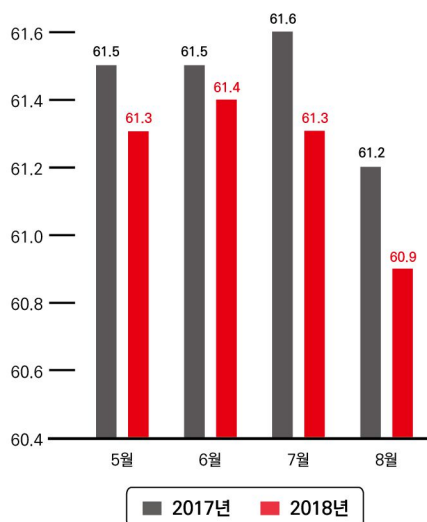


‘고용률이 늘었다’고 주장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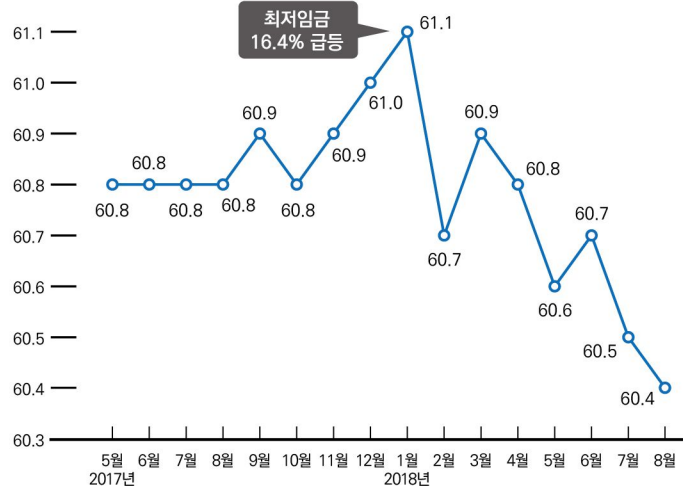
8월 고용률, 2년 3개월래 최저치로 추락시켰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용률은 계절성을 가지기 때문에 계절성을 조정해야 한다. 하나의 방법은 1년 전 같은 달의 수치와 비교하는 것이다. 올 1월을 제외하면 전년동월대비 모두 고용률이 하락했다. 특히 7월과 8월은 하락 폭이 0.3%p로 연초보다 더 벌어졌다. 또 하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계절조정된 고용률 수치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올해 8월 고용률은 60.4%로 2016년 5월(60.3%) 이후 최저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60.8%)에 비하면 무려 0.4%p나 줄었다. 어떻게 봐도 고용률이 늘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수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청와대 고용상황판은 인테리어인가?

고용률은 끝없이 추락하고



단위 : 원계열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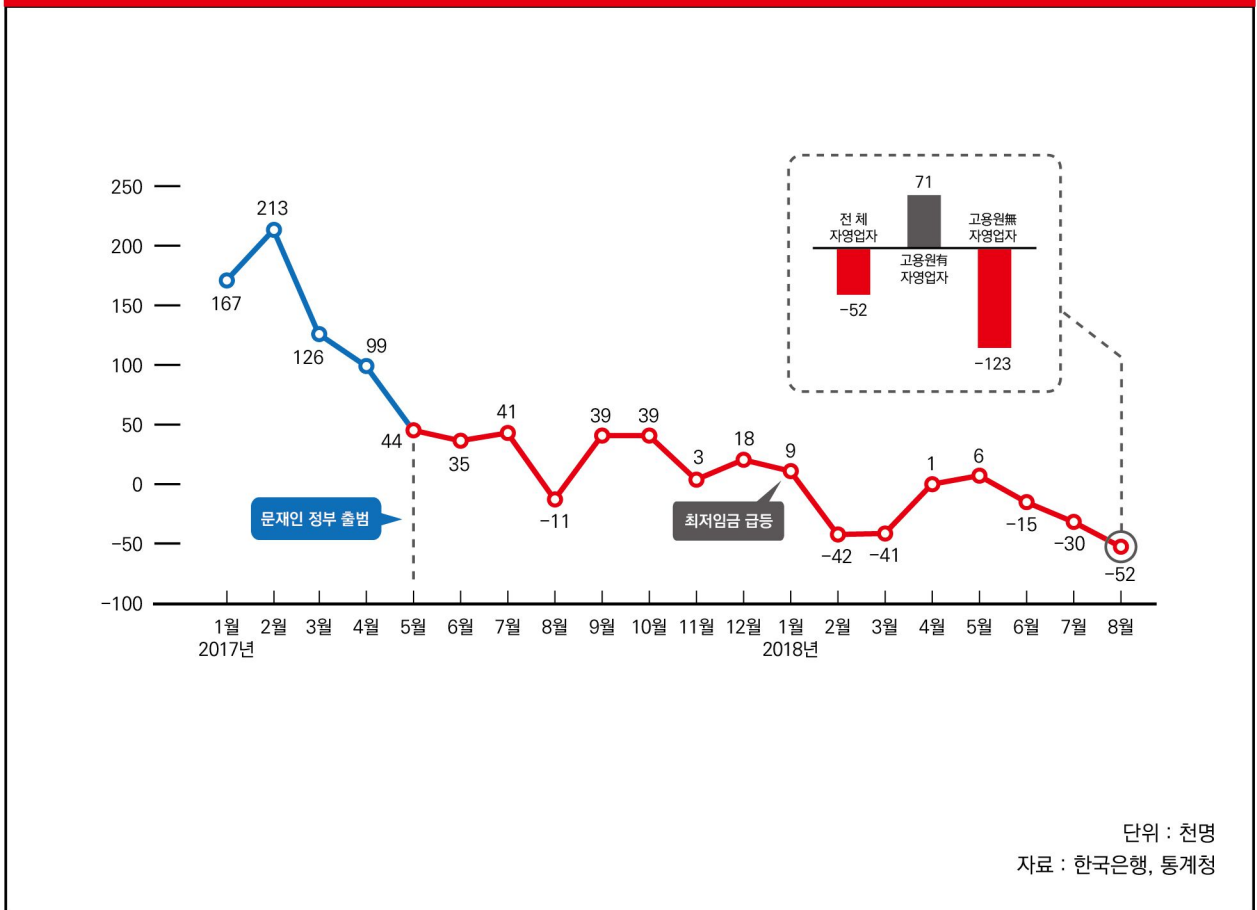
단위 : 계절조정 계열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최저임금정책을 택한 문재인 정부, 자영업자를 버렸다

최저임금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8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 2천 명 줄었다. 지난해 5월에는 자영업자 증가폭이 4만4천 명 이었다. 자영업 일자리 증가폭이 15 개월 만에 약 10만 개 줄어든 셈이다. 하락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자영업자 간 양극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8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1천 명 늘어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2만3천 명 줄었다. 임시·일용 근로자를 활용하며 근근이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생업에서 퇴출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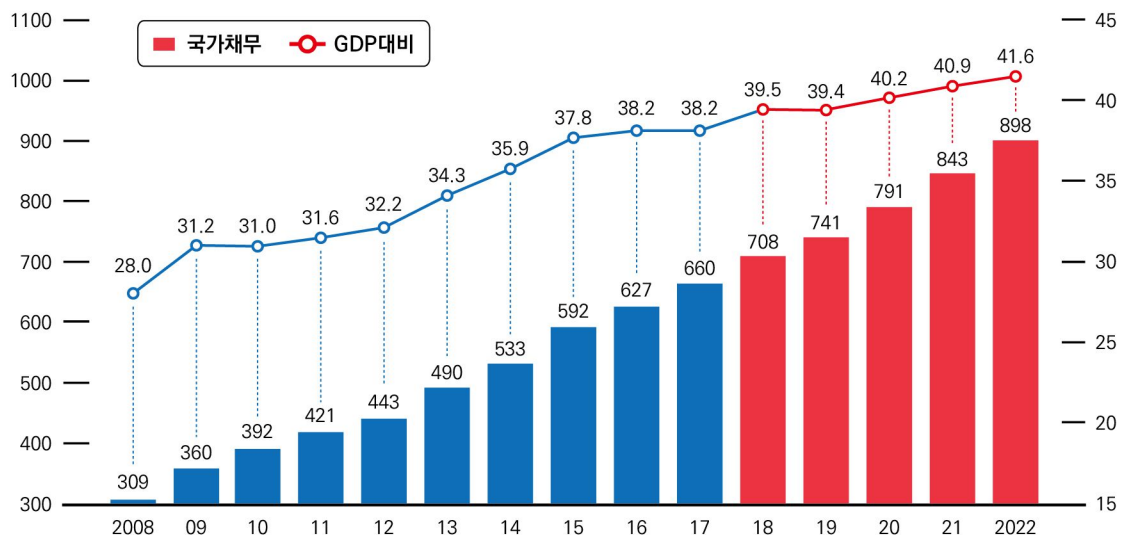
급감하는 자영업자



집권전에는 재정건전성이 문제라더니 이제는 '내로남불' ... 국가부채를 더 늘려도 좋다?

집권 전에는 이랬다. “나라 빛은 아~몰랑,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되나?, 국가의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한다. 새누리당 정권에게 국민의 빛은 남의 빛인가?”(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성장 Handbook, 2016) 집권하니 완전히 진짜 나 몰라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6일 “GDP (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정도로 관리하는데, 그게 왜 45% 정도가 되면 안 되나 생각한다”고 하며 대규모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걱정하던 2016년의 국가채무비율은 38.2%였다. ‘내로남불’도 이 정도면 후안무치 수준이다.

국가채무비율 38%는 위험, 45%는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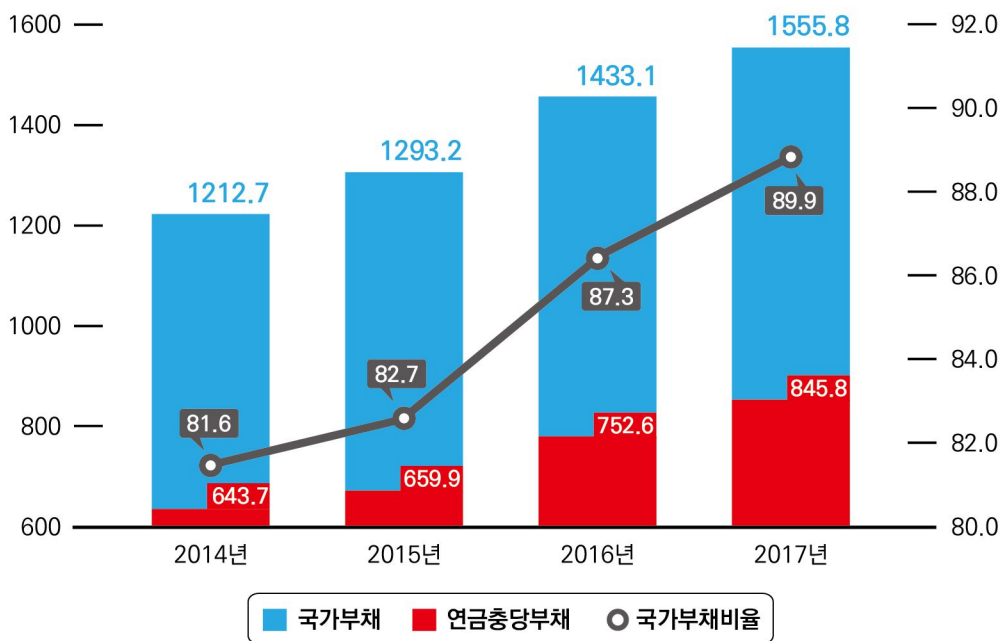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자료 : 기재부,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부채비율 더 높여도 된다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숨은 빚’은 나 몰라라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에 절반에도 못 미쳐 양호한 편이라며 국가채무비율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에는 공무원·군인연금 지출에 대비한 총당부채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잠재부채를 포함하면 국가부채는 2017년 약 1,556조 원으로 국가부채비율은 90%에 이른다. 문제는 앞으로 국가부채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공무원 17만4천 명 증원으로 연금 수혜자 자체가 늘어나 연금총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다. 노인대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청년구직수당 신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복지 확대 정책도 국가 부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재정건전성은 ‘최후의 보루’이다. 지속가능한 재정은 후세를 위한 당대의 의무임을 잊었는가.

연금총당부채 포함하면 국가부채비율은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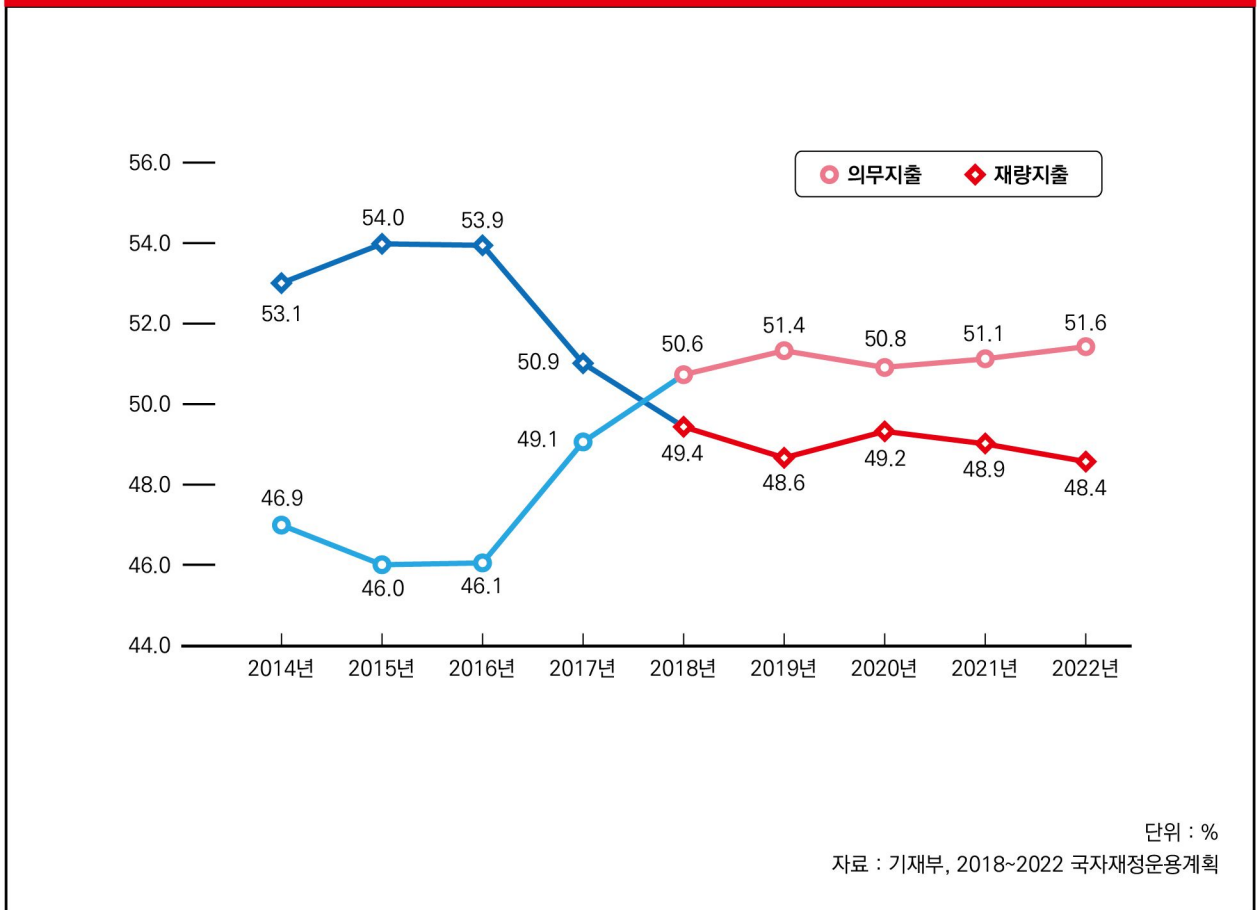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of GDP
 자료 : 기재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문재인 정부, 비핵화는 가역적(可逆的)으로 하더니 재정적자는 비가역적으로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무분별한 복지확대로 재정적자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재정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성된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예산으로 정부가 원한다고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아동수당·건강보험 등 복지 4종세트가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복지가 블랙홀처럼 예산을 흡수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결국 2018년 의무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 예산의 절반인 50%를 넘어섰다. 재정적자가 비가역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일밖에 없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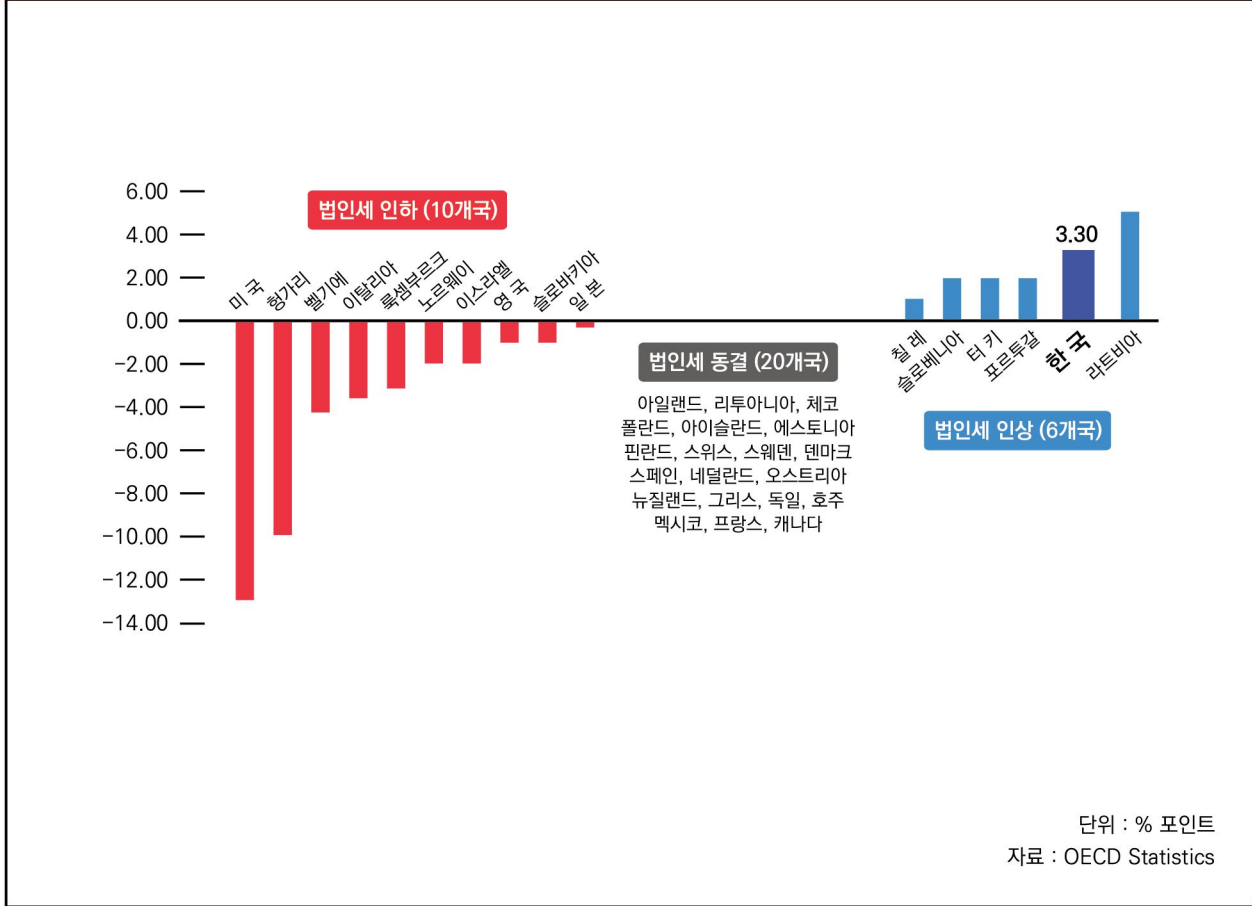
50%가 넘는 의무지출 비중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으로 ‘오는 기업’ 막고, ‘있는 기업’ 등 떠민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를 9년 만에 반전시킨 것은 물론 법인세 인하의 글로벌 추세를 역주행하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 → 21%로 인하했으며 일본은 2012년 39.54%에서 현재 29.74%로 영국은 30%였던 법인세율을 지난 10년간 19%로 인하했다. 2016~2018년 중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는 OECD 36개국 중 6개국에 불과했다. 그중 한국 법인세 인상은 라트비아에 이어 2위다. 이러한 조세경쟁력으로 어떻게 기업 투자를 일으키고 해외기업 유치 하겠는가?

글로벌 역주행...법인세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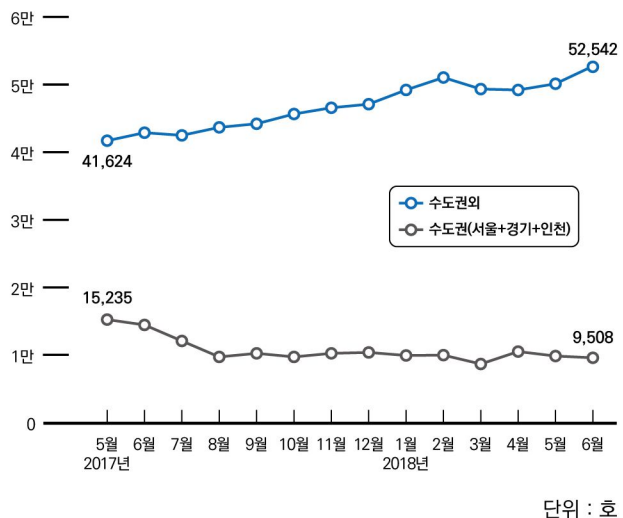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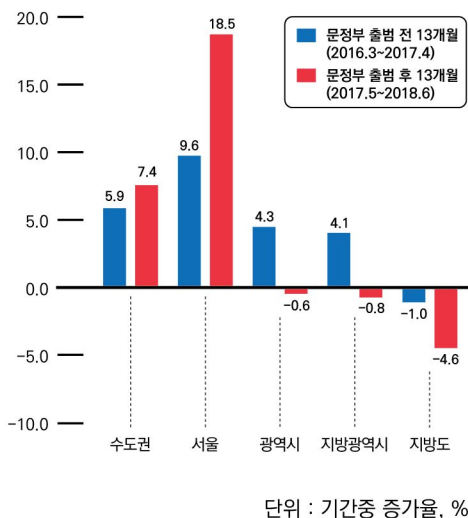


집값 안정화?

집값 양극화로 국민갈등만 폭발시키다

문재인 정부,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지난해 '6·19 대책' 이후 16개월 동안 무려 8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냈다. 문제는 이 정책들이 모두 수요억제와 재건축 규제, 조세 강화 등 참여정부의 아마추어 부동산의 짝퉁이라는 점이다. 서양 속담에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Garbage In, Garbage Out)"라는 말이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은 폭등한 반면 광역시 등 지방 집값은 급락하면서 지역 간 격차만 확대되었다. 미분양 아파트도 수도권은 줄고 지방은 쌓여만 간다. 지역간·계층간 갈등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안정이 아니라 시장 경색이었기 때문이다.

아파트값, 수도권만 폭등...미분양, 수도권 줄고 지방 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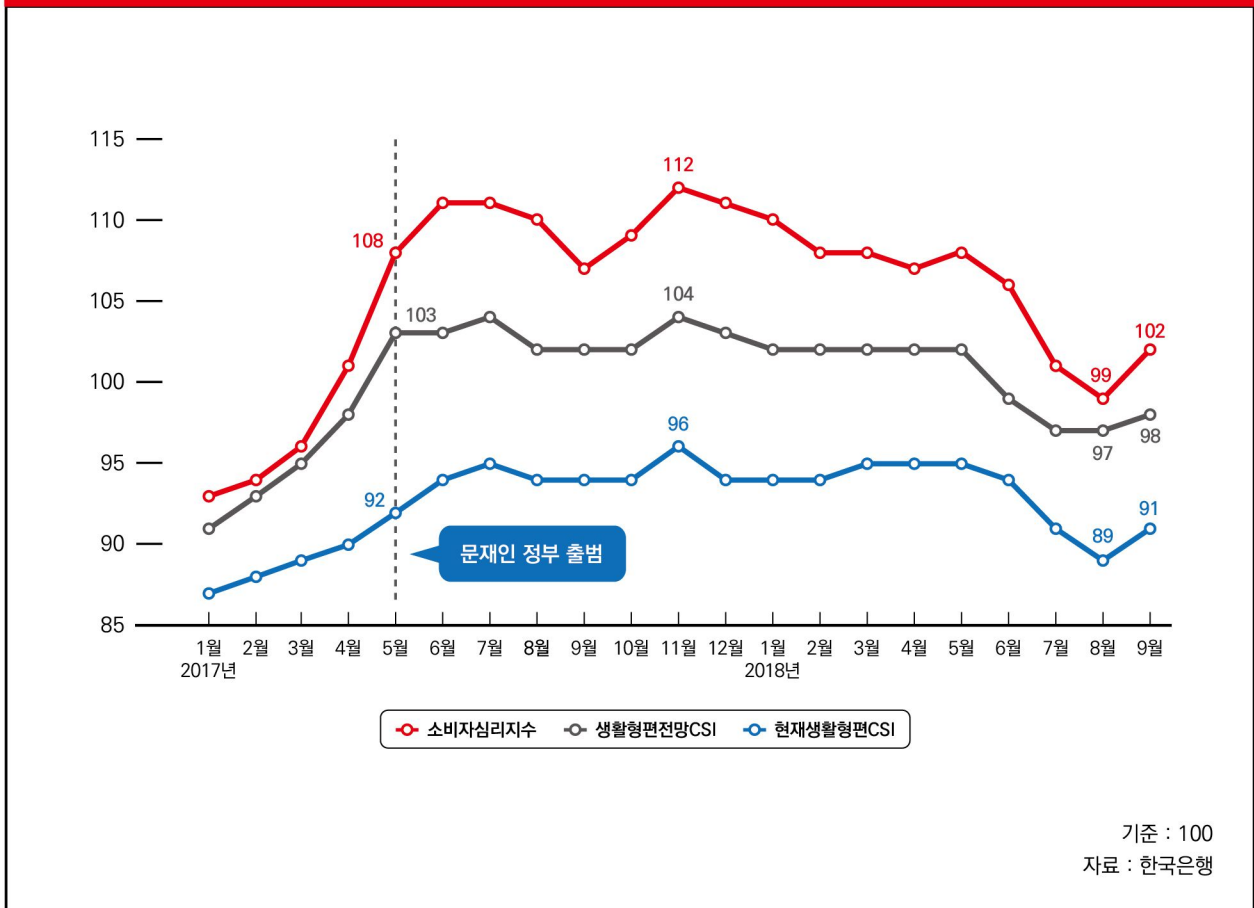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반짝 상승했던 소비심리 문재인 정부, 소득·고용쇼크 일으켜 다시 위축시키다

지난해 수출호조 덕에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되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물론 반영되었다. 하지만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112까지 치솟았던 소비심리지수가 올 8월 99, 9월 102로 추락했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실상을 직접 체험한 것이다. 분배쇼크에 고용참사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쓰러진 소비심리를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북한 퍼주기'가 밟아버리려 하고 있다.

소비심리, 다시 위축되다



문지 말고 그냥 비준? 막대한 재정부담은 ‘빼박캔트’

문재인 정부는 비준안과 함께 내년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예산을 4,712억 원으로 편성하고 기편성된 1,726억 원을 제외하고 2,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비용추계서도 같이 제출했다. 문제는 비용추계를 5년 치를 하지 않고 1년 치만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북측과 협의가 미진한 상황이라 5년 치 비용추계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미 같은 사업에 대해 통일부는 14조 원, 미래에셋대우는 112조 원, 씨티그룹은 70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인프라 구축에만 158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가 있다. 의지만 있다면 이들의 분석을 잘 활용해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근접한 추정비용을 추계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 축소의 의도가 의심된다. 일단 사업만 착수하면 저절로 굴러갈 것이라는 꿈수가 엿보인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생명보험사가 아니다.

북한 인프라(철도·도로) 투자 비용 추산

